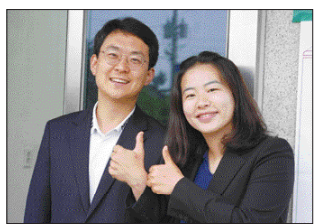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에 나선 전북 후보자들과 도내 기관장들



①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지난달 29일 전주시 우아1동사무소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투표를 하고 있다. ②국민의힘 양정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도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투표를 하고 있다. ③진보당 백승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도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④무소속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2도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투표를 하고 있다. ⑤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가 익산 북일초등학교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등과 함께 투표를 하고 있다. ⑥전호성 전북교육감 후보가 도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와 함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⑦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도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⑧우범기(오른쪽) 전주시시장과 배우자 주은경씨가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투표를 하고 있다.



민주 박지원 국회의원 후보
김제 만경서 사전투표 참여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군산·김제·부안)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김제 만경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박 후보는 이날 새벽 배우자와 함께 처가가 있는 김제 만경의 사전투표소인 금민농협을 찾아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했다. 박 후보는 “제 처가가 있는 만경에서 아내와 함께 사전투표에 참여하니 감회가 새롭다.”라며, “김제는 제게 아내와의 인연을 이어주고, 두 아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게 해준 고마운 곳이자, 부안·김제·대야·회현 주민을 위해 더 낮게 일하겠다는 마음을 다시 새기게 하는 곳”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제의 사위로서 주민 여러분께 더 많이 배우고, 더 낮은 자세로 섬기며, 성과로 인정받겠다.”며, “사위도 아들만큼 효도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어르신들 모시고,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쌓은 경험과 네트워크를 오직 지역발전의 도구로 쓰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김제·부안·군산 대야·회현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민주당 원팀 승리를 만드는 힘이 된다.”며, “이재명 정부 성공과 김제·부안·군산 발전을 위해 민주당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특별취재반

도지사 후보 선대위, 상대 후보자 고발

이원택 선대위, '이 대통령과 사전 상의' 발언 논란 김관영 후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김관영 선대위, 민주 이원택 후보·윤준병 도당위원장 고발... 도내 게시된 현수막 관련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측이 상대 후보자를 고발하고 나섰다.

#이원택 선대위, 김관영 후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이 대통령과 사전 상의' 발언 논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인 이원택 선거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원택 후보 선대위는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며 “김관영 후보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전북도민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선대위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달 23일 CBS 전북방송 라디오 프로그램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무소속 출마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무소속 출마의 불가피성에 대해 이재명 대

통령께 사전에 말씀드리고 상의(교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선대위는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형외과 고위 관계자 및 당 지도부에 확인한 결과 김 후보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며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선거에 악용하는 황당한 꾀변이라고 규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선대위는 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거론하며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는 현금 살포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게 되자 정치적 정당성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통령의 정치적 후광과 목시적 지지가 있는 것처럼 유권자를 기만했다”며 “대통령과 사전 상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개적으로 공표한

것은 선거인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명백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특히 “김 후보의 발언으로 인해 향후 당선무효형 가능성에 따른 도정 공백과 재보궐선거 비용 발생 등 전북도민이 막대한 사법적 리스크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며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에 엄정하게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김관영 후보 측, 이원택 후보·윤준병 도당위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무소속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이날 전북 지역 곳곳에 게시된 불법 현수막과 관련해 이원택 후보와 윤준병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대위에 따르면 이 후보와 윤 위원장은 사전투표일 이틀 전인 지난 27일부터 전북 14개 시·군 전역에 김관영

후보를 겨냥한 '현금살포! 거짓말 정치 투표로 심판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문제가 된 현수막에는 정당명이나 게시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언론 취재 과정에서 “당 차원에서 게시한 것이 맞고, 내거티브도 선거운동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영 후보 선대위는 “공직선거법 제90조 1항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이나 시설물의 설치·게시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민주당 전북도당이 게시한 현수막은 법에서 허용한 시설물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수막 내용은 김관영 후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면서 부정적 이미지를 유권자에게 전달하고 있다”며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불법 게시물에 해당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시와 군산시 등 일부 전북 지역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현수막이 욕의광고·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철거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취재반

“현수막으로 선거운동 방해 말라”

김관영 선대본부' 김명지 본부장
민주 도당 현수막 게시 행위 관련

'도민 후보'를 자임하며 무소속으로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관영 후보 측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현수막 게시 행위를 “조지적인 선거 방해 행위”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무소속 김관영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인 김명지 본부장은 지난달 29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전북도당이 전날 밤과 새벽 사이 전북 도내 곳곳에 김관영 후보 현수막 주변으로 대량의 현수막을 집중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이 같은 움직임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며 “문구 자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게시 방식과 배치 의도는 특정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는 “농촌 지역 면사무소 주변만 해도 한 곳에 20~30장씩 붙어 있는 사례가 있다”며 “특히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인 어젯밤 10시 이후부터 새벽 사이 집중적으로 게시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관영 후보 지지자들의 민원이 새벽부터 계속 접수됐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선관위 신고와 함께 지구대에도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과 선관위 관계자가 현장에 출동해 게시 작업자를 적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투표합시다 라는 표현 자체는 공익적 선거 참여 독려



문구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도 “현금 살포, 거짓말 정치 등의 표현을 특정 색상과 강조 기법으로 배치해 특정 후보를 연상시키도록 만든 것은 부정적인 의도성이 짙다”고 주장했다. 또 “합법적으로 설치된 김관영 후보 선거 현수막 바로 옆이나 주변을 둘러싸는 방식으로 여러 장의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게시해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다”며 “이는 김관영 후보의 정상적인 선거운동 효과를 떨어뜨리기 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실제 김 본부장이 공개한 사진에는 김관영 후보의 선거 현수막 주변으로 다섯 장의 현수막이 연속 게시된 모습이 담겨 있었다. 현수막 규모와 관련해서는 “군산에서만 현재 파악된 수량이 3000장이상이며 전주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북 전체로 확대하면 상당한 물량이 게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불법 여부 논란이 있는 현수막 철거에 나서기도 했지만 민주당 전북도당 측이 철거 보류 요청 전화를 했다”는 내용도 접수됐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욕의광고·불법 위반 여부는 물론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검토 중”이라며 “직권 여당이 오히려 불법 소지가 있는 현수막 게시를 사실상 조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이지 말라”

이재명 대통령 지지 모임, 김관영 후보 사퇴 촉구
“전북 발전에 도움 안되는 위험한 정치적 도박” 주장

이재명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소속 이광익(전 YMCA 이사장) 목사 등 회원 10여 명은 지난달 29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관영 후보는 지난 20일 전북CBS 라디오 방송에서 ‘무소속 출마의 불가피성에 대

해 대통령께 말씀드린 적이 있다’며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던 것처럼 발언했지만, 대통령실은 통화 사실조차 없었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실 발표가 사실이라면 이는 대통령의 명성과 권위를 자신의 선거에 이용한 후안무치한 정치 행위”라며 “반대로 김 후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직 대통령을 선거 개입 논란과 선거법 위반 공세의 헌법판으로 끌



어들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또 “현재 전북은 국가 예산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 과정에서 정부와 민주당, 대통령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이재명 정부가 전북 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대통령까지 정치 논란에 끌어들이는 것은 전북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위험한 정치적 도박”이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김관영 후보는 대통령을 정치적 공격의 대상으로 몰고 있다”며 “이들은 민주당 지지자와 전북도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 말미에 “대통령을 정치적 논란에 끌어들이는 책임을 즉각 사과하라”며 “김관영 후보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특별취재반